



근거없는 특파원 조기소환 후 사규 무단개정

개정 날짜까지 조작, 단협도 무시...박사장 '사규 농단'

박정찬 사장이 연합뉴스 운영의 근간인 사규를 절차와 단체협약까지 무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뜯어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근거 없는 양정우 특파원의 징계성 조기 귀임 인사를 내면서 절차상 하자를 노조가 문제 삼자 뒤늦게 사규를 무리하게 고치면서 개정 날짜도 조작했다.

기획조정실과 인사부 등에 따르면 박 사장 측은 사원의 인사와 징계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바뀐 운영규칙은 '인사위는 상무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편집상무가 된다'(제2조 1항)를 '인사위는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된다'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전무이사 신설에 따른 관련 사규 개정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칙이 바뀐 시점과 배경이다.

노조가 지난달 23일 양 특파원의 인사와 관련, 인사부에 문의했을 때 "양 특파원의 인사는 오늘(23일) 오전에 열린 인사위에서 결정됐고 성기준 전무가 인사위의 위원장을 맡았다"고 인사부측은 밝혔다.

노조는 "현재 편집상무가 없어졌고 상무이사가 1명 뿐이므로 현행 사규로는 전무이사가 위원장 자격이 없

으므로 양 특파원의 인사를 결정한 인사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부 측은 이에 대해 "사규는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히고 "상무가 없으면 전무가 하는 것이냐"며 굳세게 해명했다.

그러나 1일 노조가 기획조정실에서 새로 받은 사규에 따르면 개정이 안 됐던 인사위 운영규칙이 돌연 변경돼 있고 심지어 개정 날짜가 지난달 21일로 명시됐다.

노조가 양 특파원 인사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자 회사가 뒤늦게 사규를 부랴부랴 고치면서 개정시점을 인사 이틀전으로 역지로 짜맞춘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회사의 기틀을 무시하는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규관리규정에 따르면 '사규의 개폐가 있을 때는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제5조)라고 돼 있다. 하지만 사내게시판엔 해당 사규의 개정내용이 게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규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제6조)엔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제규정, 규칙, 내규를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 노조와 협의한다'라고 규정한다.

게다가 단협은 또 '제규정 등 사규가 변경되면 회사는 노조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통지의무를 회사에 부과한다.

사측은 노조에 인사위 사규 개정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통보한 적도 없다.

인사위의 기능과 역할은 사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의 운영 규정을 바꾸려면 단협에 따라 노조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데 이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사규와 단협을 모두 어긴 박 사장 측은 사규 무단 개정은 양 특파원의 인사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또 인사위 규정을 농단해서라도 파업 참가자를 어떻게든 징계해 보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무단 개정 전 사규로는 인사위를 아예 구성할 수 없어서다.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가내 수공업도 아니고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사규를 이렇게 엉터리로 고쳤다는 게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이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른 인사와 징계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박 사장, 사태 해결보다 체면 중시하나”

연합뉴스 노조는 박정찬 사장 출근 저지를 6일째 이어가며 파업참여 평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규탄했다.

조합원들은 이날도 오전 8시50분부터 본사 7층 사장실 앞 복도에 모여 대오를 갖추고 사장의 출근에 대비했다.

박 사장은 오전 9시55분 7층으로 올라왔다가 조합원들을 잠시 둘러본 뒤 아무 말 없이 내려갔다. 멕시코시티 특파원인 양정우 조합원에 대한 조기 소환 명령이 내려진 이후 조합원들이 옛새째 7층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박 사장은 어떤 의미 있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스크림을 짠 조합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내 방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등 고성을 지른 게 출근 저지 기간 조합원들에게 던진 말의 전부였다.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 사무국장 등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져 분신청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했다.

결국 연합뉴스 수장으로 파업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의 힘에 호소해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셈이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양정우 멕시코 특파원에 대한 조기 소환 조치를 낸 박 사장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공 위원장은 "전쟁을 벌이던 사람들도 협상할 때는 총과 대포를 쓰지 않는다"며 "박 사장이 협상 중에 인사권을 함부로 휘두른 것은 사태를 풀기보다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사장은 3차 업무복귀명령으로 파업 대오가 흐트러질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집중투쟁 기간 대오에

합류한 사람이 15명이나 된다"며 박 사장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박 사장 재임 기간 보였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도 꼬집었다.

공 위원장은 사규에 '사장님'이란 표현이 들어간 걸 지적한 파업 특보를 인용하며 "권위주의적이고 답답한 연합뉴스 조직문화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자신이 사규 문구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긴 것이 엉터리 인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중투쟁 기간 본사로 상경해 출근 저지 투쟁에 합류한 전주취재본부 최영수 조합원은 "지역조합원들은 본사 조합원들에 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위안을나눌 기회가 적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정이나 투쟁 강도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지역본부의 뜨거운 파업열기를 전했다.

